‘무상급식’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핵심쟁점은 ‘막대한 예산’…정계·교육계 찬반논란 팽팽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 내 새우면서 촉발된 이 문제를 두고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논란이 교육감 출마예정자들과 교육계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에서만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무상급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짙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기초적인 복지로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비판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매년 약 1조 8천억원 이상,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경우는 매년 2조 8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먼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예산확보와 관련해 교과부가 지난해 27년만에 폐지해 논란이 일었던 교과서 공동 발행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서 공동 발행제는 지난해 8월 교과부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면서 폐지했다.

◆ 민주당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교육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

예산확보 문제로 교과서 공동 발행제 논란 부상
낭비성 예산 줄이면 급식 가능 의견도 제시돼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공동 발행제 폐지로 교과서 가격은 매년 3,500억원 가량 오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조 422억원, 매년 약 2,1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이계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논평을 내고 “앞으로 5년간 출판사의 이익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1조 422억원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말하며 교과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과서 공동 발행제’ 폐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같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이번 지방선거 교육 핵심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교육 현안으로 내세우는데 있어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고등학생에게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2조 8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만 해도 매년 5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무리하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가족의 소득수준 및 부양 능력에 따라 무료와 할인, 보조 등 지원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일본 등의 사례와 현재 국가채무 상황, 막대한 예산 부담 등 현실을 고려해 현재 전체 학생의 13% 수준인 무상급식 비율을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지방교육의 수장인 민선교육감들의 지혜와 조정능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충남 대안교육청 학원비 공개 투명성 강화

충청남도태안교육청(교육장 정헌문)은 지난 26일. 올 6월까지 관내 55개 학원과 11개 교습소의 학원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원·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비 공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이 추진 중으로, 법 개정에 앞서 학원과 교습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학원비 공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성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수강료, 교재비, 보충수업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간식비 등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으로 학부모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가 많아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상대적으로 사교육환경이 열악한 태안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학원비의 정확한 공개와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고 입시부정’ 132명 합격 취소

서울청, 전원 일반고 재배정, 일부 학부모 반발 계속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허술하기 짝이없는 정책추진은 결국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여전히 볼썽사나운 책임공방만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정합격한 13개 학교 132명의 학생들을 모두 일반고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징계·고발할 방침이다.

감사결과 중학교에 편법입학을 유도하는 등 책임이 드러난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 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율고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자율고와 해당 중학교의 안일함과 과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처음부터 규정을 부실하게 만든 교과부와 시교육청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중학교 교장이 써 준 추천서 이외에 해당 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확인할 근거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지원에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건강보험 영수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초적인 근거서류도 필요없었다. 학교장 추천서에도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수준 등을 쓰는 공간이 없었다.

응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오로지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다.

처음부터 얼마든지 입시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학교장 추전 전형요강(‘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만든 교과부와 제도의 허술함을 알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시교육청, 부실한 제도를 우수학생 입학에 악용한 일부 자율고와 해당 중학교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제도의 허점을 알고도 악용한 일부 학부모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하고 그 피해를 더욱 키운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은 당국의 논리정연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제도는 좋은데 이를 악용한 일부 학교와 학부모가 잘못됐다’는 식의 태도는 해당 학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따라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그 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자율고들은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입시부정의 온상으로 비치는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자율고 교장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서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대로 절차를 따라 평가한 것인데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중학교들은 ‘자율고에서 우수학생 추천을 유도했다’라고 말하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자율고들은 학교장 추천전형 미달로 인한 추가모집 공문을 중학교에 보내면서 외고 등 특목고에 불합격한 학생도 응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율고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안내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전·월세 가정이나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가정 등 취지 그대로 안내를 한 학교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학교장 추천’을 특히 강조해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와 해당 중학교도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중학교에서 먼저 추천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학부모들이 먼저 추천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지난 25일 제도를 악용한 교장, 학부모 등을 징계·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문제가 된 13개 자율고, 해당 중학교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원석 기자

NEWS FOCUS

서울 북부교육청 담임교사 학부모 편지쓰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북부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년 초에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학급경영관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운동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담임교사 편지 보내기를 권장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도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담임교사의 편지쓰기가 학부모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평가를 얻은 이유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편지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은 담임교사에 따라 특색 있게 자율적으로 작성되지만 대체로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관 및 전화번호, 학급 특색 활동, 준비물, 학교생활 안내, 자유로운 상담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내용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담임교사 편지쓰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모두 네 종류의 편지 예시문을 안내하고 학교별 우수작품을 선정해 교육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학교에서는 예쁜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담임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담임교사는 교육청의 예시문을 참고해 학급경영관 및 학급 특색 활동 등을 담은 창의적인 편지를 작성한 후 학년 초 모든 학생의 가정에 발송한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활성화를 위해 2월 26일 정독도서관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매주 금요일 저녁 두 시간씩 정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속의 재미있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다. 강연은 30분간의 도입강연과 본 강연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도입 강연은 서울초등기초과학연구회 교사가, 본 강연은 정부시책연구사업 교수 및 연구원이 맡는다.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